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개헌 논의 부적절…민생 먼저 살려야"

"호남 무소속 의원 복당 당헌·당규대로 판단"

"영남지역에 특별 대우 전국정당화에 힘 쏟겠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전북 장수(58) ▲고려대 법대 ▲15·16·17·18대 의원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의장 ▲산자부 장관 ▲민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거대 여당을 견제할 복안은.

▲일당 독주는 민주주의 원리는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과 함께하면 수적 열세도 극복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 내·외 투쟁에 나서는 등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회가 개원 됐지만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가 아직 정상화된 상태가 아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진정한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상임위가 본격 가동된 뒤에는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해결방안은.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여부는 심사를 통해 당헌·당규대로 판단할 것이다. 한나라당처럼 무차별 일괄 복당은 없다.

―당 지도부에 영남권 인사를 발탁할 의향이 있는지.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도 취약지역인 영남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에 나설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당 최고위원 지명직 2명 가운데 한 명은 영남에 배정할 것이다. 인선은 현재 후보군이 압축중이며,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이다.

―당 지도부를 옛 열린우리당 출신이 장악하면서 '돌고 돌아 우리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인사들이 합심해 이뤄진 정당이다. 과거 지향적으로 출신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대안이 있는 강력한 야당이 될 것인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것이다. 내년 초에 여야간 협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을 배제하고, 의원들은 당적이 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150일에 대해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 철학이 없고, 국정운영시스템도 형편없다. 국민의 기대에 비해 국정운영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안타깝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한이 없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당 의회는 국민의 세금만 갉아먹으며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서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복수의 정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다. 원 구성도 못 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회는 보수화된 측면이 강하고,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뉴 민주당 플랜'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뉴 민주당 플랜은 질 좋은 성장, 공동체적 복지수준 향상, 식품위생 및 교통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등의 비전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해결 방안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대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에 '강경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기색을 보인다면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교 역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지역발전정책을 평가한다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한 것이다. 현재의 정권은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을 맡는 것인데, 무조건 바꾸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반 토막난 행복도시 관련 예산부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임동욱 기자

"원 구성, 국회의장이 나서라" 권선택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회의장실을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원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원장 후보, 서서히 윤곽

법사위, 민주당 유선호 의원 유력
통외통위, 남경필·박진 경쟁 치열

여야가 이달 말까지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을 정한 가운데 예비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8개 상임위가 구성될 경우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포함해 12개, 민주당 등 야당이 6개 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의 축소여부를 두고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법제사법위원장은 3선의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다룬 후 본회의에 올리기 전 마지막 심의를 맡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기존 권한을 그대로 계승하기 원하지만 한나라당은 '1개월 내 자동 상정, 3개월 내 직권 상정'으로 권한을 제한해야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통외통위원장은 남경필·박진 의원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권영세 의원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관광위원장은 민주당도 강력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 언론정책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에 갈 가능성이 크며 고흥길·심재철·정병국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직 여야간 다툼이 치열한 기획재정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서병수·이한구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효석·강봉균·추미애 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 자리가 여야 어디로 갈지에 따라 반대 당으로 갈 가능성이 큰 국토해양위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윤두환·조진형 의원이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으로 온다면 이낙연 의원이 확실시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원내외 '개혁블록' 구축 추진

한나라와 차별화…野性 회복·전통적 지지층 복원

민주당내 개혁 성향의 원내외 인사들이 '개혁블록' 구축 작업에 나섰다.

이념·노선 면에서 '좌(左) 클릭'을 시도,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야성(野性)을 회복하고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는 '촛불 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대여 전략 등에서 무기력증을 보여온 민주당의 현주소에 대한 자기반성이 깔려 있다.

재야파 출신의 이목희 전 의원은 최근 공개 제안서를 통해 "민주당이 여전히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행동하고 투쟁하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진보개혁 정치포럼'(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짝퉁 한나라당'으로는 결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다"며 "당내외 모든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단결을 통해 당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고 외연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블록에는 재야파 중심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모임, 정동영계 일부 등 원내외 인사 4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달 하순께 출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민주 사무처장 '무늬만 공모?'

자격 기준도 안 밝혀 "중앙당 국장 살리기 꼼수" 비난

민주당이 오는 28~29일 양일간 전국 16개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공모한다고 밝혔으나 무늬만 공모일 뿐 중앙당 국장급 인사들을 뽑기 위한 '위장 공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당 사무처장 공모 사실을 알리면서 접수는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당산동 중앙 당사에서 이뤄지며, 16개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모 배경에 대해 "투명하고 깨끗한 정당 운영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차기 정권 창출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당 내·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수혈하기 위한 혁신적 공모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모 내용은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모 자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아 공모라는 형식만 빌려 중앙당 내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내의 일반적 예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앙당이 당초 공모와 같은 절차 없이 중앙당 사무처 국장급 인사 중에서 시·도당 사무처장을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국장들의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비판(광주일보 7월15일 보도)이 제기되면서 '공모'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